

한국교육행정학회 소식지

THE NEWSLETTER

발행처 한국교육행정학회(www.keas.or.kr) / 주소 (406-772)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12-1 인천대학교 사회대 창의인재개발학과사무실(13-215호)
발행인 이윤식 / 편집인 김왕준, 이호신 / TEL 011-9952-6559 / E-mail ksseat@hanmail.net

학회의 활동사항 및 학술대회 개최, 학회관련 업무는 홈페이지(www.keas.or.kr)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주론 |

교육과 자유

천세영 | 충남대학교

서문에서

나중에 안 일이지만 대한민국
의 땀모들과 그 땀모들의 손에
이끌려 조기해외유학에 나서는
대열이 만들어진 것은 아이엠에
프 경제위기 때문이었다고 한
다. 기러기야빠 독수리아빠 오리엄마 등 여러 가지 안타
깝고 슬픈 이야기들도 있었지만 돈 많은 비겁한 부자들
의 몰지각한 도피라고 손가락질도 당했다. 이후 사태는
많이 진정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편치는 않아 보이고, 아
주 최근엔 국내 최고부자집 아들의 국제중학교 입학 문
제가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궁금했다. 도대체 교육이 무엇이길래 가족들을 생이
별시키는가 궁금했다. 그래서 교육학을 다시 공부해보
기로 했다. 그러나 공부는 쉽지 않았다. 국가의 울타리를
넘어서까지 공부를 떠나는 이유가 궁금했다. 그리고 미
진하지만 책을 내고 사람들과 이야기해보기로 했다.



프롤로그에서

본디 우주가 그러하듯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처음부
터 그 자리에 그 모습으로 있었다. 다만 우리의 눈에 안
보였을 따름이다. 보이고 난 후 그것은 세상에 처음 탄생
한 것이 되었고 그것을 처음 본 사람은 그것에 자기의
이름을 붙이고 급기야는 자기가 만든 것이라고 고집하
고 어느 누구에게도 나누지 않게 되었다.

교육도 그러했다. 상제께서 처음 내려주신 교육의 모
습이 있었다. 벨포이 신전에 이데아로 있었고 노자의 도
로 있었고 공자의 인으로 부처의 자비로 그리고 예수의
사랑으로 있었다. 다만 우리는 몰랐을 뿐이다. 처음 그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몰랐을 뿐이다.

세월이 흐르고 교육은 원래의 그 모습을 잊었다. 사람
들은 교육 덕에 더 많은 자손을 번성시켰고 더 운택한
삶을 더 넓은 지경을 가꾸었다. 맹수의 위협으로부터 추
위로부터 배고픔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 그러는 사이
이 모든 번영이 상제께서 허락하신 뜻이었음도 잊었다.

삶이 생각대로 되지 아니하고 교육이 생각대로 되지 아니하자 사람들은 어미의 곁을 떠나고 고향을 떠나서 먼 타향물 설은 곳으로 낙원을 찾아 고향을 나섰다. 천축국으로 서역으로 동방으로 여행을 나섰고 지구별을 벗어나 다른 별을 찾아나서기도 했다.

다른 나라로 찾아 나서는 교육 그것을 일러 유학이라 하였다. 사실을 말하자면 처음을 말하자면 교육만큼은 어미곁에서 고향 땅에서 하는 것은 아니었다. 어미로부터 이웃으로부터 배우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다. 세상은 어미의 품보다 고향의 산하보다 훨씬 넓은 것이다. 그래서 선친과 선조들도 늘 청운의 뜻을 품고 고향을 떠났다. 먼 곳을 다녀 온 사람들일수록 보다 넓은 지경을 경험한 것을 보아도 분명 세상은 어미의 품보다 넓은 것이 분명하였고 그것은 어미의 품을 벗어나 먼 여행길에서 배워야 하는 것이었다.

그랬다. 교육은 그러했다. 원래부터 동굴 밖으로 나가는 모험을 해야 했고 현관(玄關)을 열어 제치고 나가야 하는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다. 두려운 일을 접할 때는 용기가 필요한데 그 용기의 근원은 무엇일까? 현관 밖에 동굴 밖에 무엇이 있는지 얼마나 무서운 맹수가 있는지 천 길 낭떠러지가 있는지 조금만 알 수 있다면 그 위험을 감당할 힘이 내게 얼마나 있는지 알 수 있다면 용기를 내는 일이 어렵지만은 않을 듯하다. 문제는 알 길이 없는데 알려주는 선생님이 계시면 용기는 좀 더 가까이 에 있게 된다.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것은 어머니의 손을 꼭 붙잡고 나서는 길이라.

내가 모르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삶의 여정에서 용기를 갖는 일은 이처럼 그 세상에 대해 알아가는 일이며 그 세상으로 안내하는 선생님을 만나는 일이다. 이제 어머니의 품을 떠나 우리는 선생님의 인도를 받으러 나선다. 이것이 교육이니 교육은 곧 집 밖으로 고향 밖으로 그리고 마침내 타국머나 먼 곳까지 나아가는 여정이다.

초국적 교육에서 길을 찾다

교육에 대해 물었다. 교육은 원래 무엇이었으며 교육으로 왜 사람들은 상심하고 고향을 떠나는가 물었다. 인류의 고향 아프리카를 떠나 다시 고향 아프리카로 돌아가는데 까지 이백만 년의 세월이 흐른다.

이집트와 수메르에서 물을 가두고 농사를 지었으며 그리스인들은 인간의 유한함을 깨달았다. 황하 유역의 사람들은 공부하는 방법을 깨쳤고 인더스 강가의 사람들은 인생의 허무함과 고통을 받아들였다. 그럼에도 인간들은 서로 사랑하고 돕는 일만이 사는 길임을 마침내 깨달았다. 물론 이런 가르침들은 생각했던 것처럼 몸에 익혀지지 않고 훈련과 고통이 없이는 금방 망각되었다. 망각은 무지로 이어지고 무지는 오만과 죄악을 만들고 개인과 집단의 불행을 끊임없이 만들어냈다.

결국 교육의 본디 모습은 변하지 않았으나 사람들은 교육의 힘으로 살아남고 자식을 낳고 가족과 국가를 일구고 나면 이내 그 본디 모습을 잊어버린다. 그러나 금방 사람들은 어딘지 알 수 없는 불안감으로 고향을 등지고 새로운 삶의 터를 찾아 고향길에 나선다. 유학이 그러한 것이다. 교육은 그렇게 국가의 경계를 넘을 수밖에 없었다. 끝없이 계속되어 온 교육의 여정은 삶과 자유를 찾아 다닌 인류의 진화사이며 역사 그 자체이다.

끝도 없는 무삭

자유, freedom, liberty의 사이

책을 내고 일주일만 지났을 때 갑자기 책 표지를 보며 아차싶었다. 책의 주제가 자유인데, 영어로 to be free, 그러니 명사형으로 freedom이 쓰여졌다. 어라 교육에서 자유는 보통 자유교육에서 쓰여진 듯 하고 이 때는 free education이라 안 하고 liberal education이라고 하는 것

인데, 그럼 education and freedom이 아니고 education and liberty라고 했어야 하는가 하는 질문에 화들짝 놀라고 말했다. 어찌지? 무식이 탄로나고 말았다.

질문은 또 하나의 꼬리를 물었다. 자유는 freedom의 번역어인가 liberty의 번역어인가? 우리에게도 원래 자유라는 개념이 있었는가? 대답은 아무래도 아닌듯하다. 근접했던 개념으로는 노장자의 무위자연이거나 공자의 중심소욕불유구 정도일 것이다. 결국 우리는 프랑스 시민혁명으로 탄생한 liberte로부터 근대시민적 자유를 배웠다는 편이 옳다. 근대적 자유는 어디에서 왔을까? 연원을 따져보면 기독교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은사로 선물한 freedom으로서 자유일 것이다. 그러나 그 자유는 에텐 동산에서만 잠시 맛 보았을 뿐이다. 아담과 이브는 에텐의 사과를 따 먹을까 말지의 선택의 자유를 누렸다. 급기야 여인이 참지 못하고 빨갛고 새콤한 사과를 베어 먹고 말았고 혼자 먹기가까워 연인과 함께 하고 말았다.

인류는 그리고 자유를 잃고 낙원으로부터 쫓겨나왔다. 먹을 것 입을 것이 더 이상 손을 뻗치면 얻을 수 있는 그곳에 없었다. 인류는 땀을 흘려 땅을 경작해야 했고 일을 도와줄 자식들을 낳아야 하는 산고를 겪어야 했다. 자유는 더 이상 없었다. 입을 것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는 속박과 압제를 견디어 내야만 했다. 살아가는 일은 고행이었다. 고행을 벗어나는 길은 어디에도 없었다. 수천년 수만년 수십만년이 지나서야 그 자유가 속죄의 댓가로 주어지는 신의 선물임을 깨달았다. 혁명의 산고를 거치고서 얻는 자유마저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신이 허락한 것임을 깨닫는 데는 실로 오랜 세월이 걸렸다.

교육은 실로 그러한 혁명의 과정이었던 셈이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 생전 들도 보도 못한 곳으로 나아가서 새

로운 삶을 만들어가는 실로 무섭고 험난한 길이었던 것이다. 그 때 만난 선생님이야말로 참으로 고마운 분이였다. 그 때 쉬었던 나무 그늘이야말로 참으로 아늑한 학교였다.

이처럼 교육은 자유를 향한 여정이었다. 그리고 아직도 우리는 에텐 동산에서 누렸던 자유를 얻기 위해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고 교육에 매진한다. 그 수고로움이 끝나는 곳에 자유가 있을 것이나, 수고로움은 시지프스의 부조리처럼 끝이 보이지 않는다. 단지 그냥 지리한 장마 끝 구름사이로 잠깐 잠깐 얼굴을 내밀 뿐이다. 이제 우리는 그 자유와 교육이 우리의 삶 자체임을 깨달아야 한다. 그리고 그 잠깐 잠깐 내미는 해를 보고 감사할 수 있는 영원한 자유를 꿈꾸어야 한다.

후기와 사사

교육과 자유는 저자의 것이 아니다. 만사가 힘을 합쳐 만들어 준 선물일 뿐이다. 꿈에도 생각 못하리만큼 경제적 번영을 이루고 책을 쓴다고 연구비를 지원해 준 대한민국의 태어난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다. 2008년 한국연구재단의 인문학저술연구사업의 지원금이 이 책의 아버지인 셈이며, 처음 생각에서 오늘까지 항상 저자와 함께 공부해 온 충남대학교 제자들이 어머니인 셈이며, 팔릴 것 같지도 않은 책을 출판해 준 학지사 출판사가 형제인 셈이며, 재미도 썩 없는 책을 사주고 읽어줄 독자들이 자매들인 셈이다. 한국교육행정학회의 동료들이 읽는 뉴스레터에 군더더기 같은 소개글을 쓸 수 있게 된 것 또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른다. 세상은 정말 아름다운 곳임을 깨닫는다. 이렇게 또 작은 자유를 얻는다.



| 논단 I |

학생자치 활성화를 통한 학교문화 선진화*

정성수 | 대구교육대학교

I. 들어가며

OECD 가입, G20 정상회의 개최, 세계 10위권의 경제력 등 우리나라의 국격(國格)은 더욱 높아지고 있지만 미래 사회의 세계 리더로서 성장해야 할 우리 학생들의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의식은 매우 미흡하다. 최근 학교 폭력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우리나라 학교의 현실도 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정규 교육과정을 통해 민주시민의식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과정 외의 학교생활을 통해 미래사회의 핵심적인 역량을 길러가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학생자치 활성화는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는 학교의 문화를 선진화시키기 위한 근본적인 개선책으로 인성교육을 중요시하고 있으며 인성교육을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의 하나로 학생자치를 강조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외, 2012). 학교자치도 완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학생자치는 너무 선부른 논의일 수도 있다. 하지만 단위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자치가 학교자치이며, 학교자치가 실현될 때 비로소 교육자치가 완성될 수 있다고 볼 때(박세훈, 2012), 학교자치는 학생자치를 통해서 비로소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교육자치→학교자치→학생자치로 이어져야 한다는 하향식(Top-down) 방식에서 벗어나 학생자치

→ 학교자치 → 교육자치로 이어지는 상향식(Bottom-up)으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때이다.

이 글에서는 학생자치를 활성화 함으로써 학교문화를 선진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II. 학생자치의 의미

학생자치는 넓게 보면 교육자치의 한 부분이다. 교육자치가 일반행정이나 중앙행정으로부터의 부당한 간섭과 지배로부터 벗어나 자율적으로 판단, 결정, 집행하는 것을 의미하고, 학교자치가 교육공동체 구성원이 참여하여 학교의 본질적인 과업인 수업과 학교생활에 관하여 외부의 간섭없이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을 지는 학교 운영체계(박세훈, 2012)라고 한다면 학생자치는 학교자치의 핵심이며, 나아가 교육자치의 한 형태라 할 수 있다. 학생자치는 다른 누구도 아닌 교육구성원의 한 집단인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의견을 만들어내어 학교운영에 반영하는 행위이므로 교육자치의 한 형태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교육자치는 지방교육자치제도와 관련해서 많이 논의, 발전되어 왔고, 학교자치는 단위학교책임경영제, 학교운영위원회, 학교자율화 정책 등에 의해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할 수 있으나 학생자치는 많이 진전되었다고 보기 힘들다. 최근에서야 학생체벌과 학생인권

* 이 글은 한유경 · 정제영 · 김성기 · 정성수 · 윤신덕(2012). 인성교육 강화를 위한 학교문화 선진화 방안 연구의 일부분을 수정 · 보완한 것임.

조례 등이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학생에 관한 문제들이 본격적으로 조명되기 시작했다.

일선 단위학교 현장에서 학생자치는 여러 가지로 실천될 수 있는데 학생자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학생회 및 학생자치법정의 운영, 학교규칙 제·개정시 학생 참여 확대, 학생들의 자발적인 동아리 활동과 봉사활동에의 참여 유도 등이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으며, 단위학교의 학생자치 활동 우수사례들도 최근에 많이 소개되고 있다.

학생자치활동은 학교에서 학생 스스로 자율과 참여를 통하여 학교조직을 구성하여 주도적인 활동을 전개하며, 이를 통하여 학생의 권리를 옹호하고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한 자질을 키워나가서 건강한 성원으로 성장해 나가는 활동전체를 말한다. 즉 학생자치활동은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운영되는 집단활동으로 민주시민의 기본자질과 태도를 형성해 나가는 활동이다(이병환, 2012).

III. 학생자치의 법적 근거

1) 학생의 학교운영 참여 가능성

현행 교육법령에서는 다음과 같이 학교운영에 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교육기본법」에서 학생은 학교운영에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음을 천명하고 있다.

「교육기본법」

제5조(교육의 자주성 등) ② 학교운영의 자율성은 존중되며, 교직원·학생·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제12조(학습자) 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인 권리는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② 교육내용·교육방법·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

③ 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학교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원의 교육·연구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학생자치활동의 보장

이를 근거로 「초·중등교육법」에서는 학생자치활동을 보장하고 있으며, 그 조직과 운영에 대해서는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학생의 기본적인 권리가 학교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며 학교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학생은 헌법에 보장된 결사의 자유부터 표현의 자유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으로 기본적인 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초·중등교육법」

제17조(학생자치활동)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보호되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3) 학생회 지원 및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참여 보장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교장이 학생상벌이나 생활지도, 학생자치활동, 학칙개정절차 등에 대해서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의 의견을 들도록 강제규정을 두고 있다. 물론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참여수준은 학교마다 다를 수 있지만 학생이 이러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여야 함을 천명하고 있다. 또한 학생자치활동을 위한 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는 학교장이 이 조직운영을 지원하도록 강제규정을 두고 있으며, 학생은 학교운영에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공식적인 통로로서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①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9, 2011.3.18, 2012.4.20>

...<생략>...

7.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및 학교내 교육·연구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8.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9. 학칙개정절차

...<생략>...

④ 학교의 장은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0조(학생자치활동의 보장) 학교의 장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59조의4(의견 수렴 등) ②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하게 할 수 있다.

IV. 학생자치의 걸림돌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학교조직은 급격한 사회적 변화 속도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다(정제영, 2004). 특히 우리나라의 학교 현장에서는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준비 교육, 소위 '입시위주 교육'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상황이다. 시대 변화에 따라 기존의 통제·규제 위주의 학생지도에서 벗어나 학생을 인격적 주체로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필요로 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교에서 많은 학생들은 학급규칙 제정, 학급 부서 조직과 운영 등 초보적인 수준의 자치활동에서도 배제되고 있다.

학생자치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원인은

다양하게 살펴볼 수 있다. 우선 상급학교 진학을 지상 최대의 과제로 삼고 있는 입시위주의 문화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가정과 학교에서 모두 시험 성적을 높이는 것을 지상 과제로 삼고있고, 학교의 운영도 교과 성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학생들은 학교에서 규칙 준수와 질서외식 함양, 타인에 대한 배려, 바른언어 사용 등의 기본적인 민주시민 의식 교육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어 온 것이다.

학생들이 자치활동을 통해 얻는 교육적 효과가 크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대학 진학과 학력이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입시와 직결되지 않는 학생자치활동을 강조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가정과 학교에서 성적 향상과 명문대 진학만을 지상 최대의 과제로 삼는 입시문화는 학생자치활동을 목표 달성에 방해가 되는 활동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다. 또한 전통적인 위계질서를 강조하는 학교의 보수적 문화는 교사와 학생간 위계질서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게 한다. 학교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 결정에 학생이 참여한다는 것에 대한 반감은 이러한 전통적 문화에 기인하고 있다. 학생의 의견 제시는 교사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비춰질 수 있으며, 한편으로는 학생의 자치 능력, 의사결정 능력에 대한 불신도 학생의 자치활동을 저해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학교공동체 구성원들의 인식의 전환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학교문화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규제 위주의 통제적 관점에서 벗어나 학생을 인격적 주체로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신뢰에서 학생자치활동의 활성화가 시작될 수 있는 것이다. 한 예로, 학교생활규정을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제정하고 자율적으로 지켜나가도록 하는 과정은 자율과 책임 중심의

새로운 학교문화를 만들어가는 기본적인 과정이 될 수 있다.

V. 학생자치활동을 통한 학교문화 선진화

학생자치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학교문화를 선진화하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회 운영위원을 배석하게 하는 것이다. 법령상 학교운영위원회는 학생생활과 관련된 안전 심의 시에 학생대표 등의 의견을 반드시 들도록 되어 있고, 학생대표는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령상 학생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고, 안전에 대해 의사표명을 할 수 있는 합법적 권한이 있으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실질적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둘째, 학교장과 학생회 운영위원 간담회를 상설 운영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학교는 전체 교직원 회의를 주 1회 또는 월 2회 개최하고 있으며, 학교운영위원회도 평균 월 1회 개최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장과 학생회 운영위원 간의 공식적 만남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학생들의 고충과 불만, 건의사항 등을 공식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하다.

셋째, 학생회 운영을 위한 공간 및 예산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학생회 운영위원들이 공식적인 회의를 개최하고, 각종 학교행사를 주관하기 위해서는 공간이 필요하며(각종 물품 및 기자재 포함) 예산의 확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학교자체 예산 편성, 동창회 기금 지원, 학교발전기금 지원, 학생회의 자구적 노력 등을 통해 학생회 예산이 확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학생회 주관 공개포럼과 공청회 개최를 활성화

해야 한다. 학교의 생활협약이나 시설사용 규칙 등 학생들의 참여와 의견 수렴을 위한 공식적인 과정으로서 포럼과 공청회 개최를 활용해야 한다. 민주적 의견수렴 절차를 제대로 해나가면서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의사결정을 해 나가는 것은 중요한 학습과정이 될 수 있다.

다섯째, 인근 학교 학생회 간의 연계와 협력이 필요하다. 학생회 활동은 교원들의 활동과 마찬가지로 인근 학교간 연계를 통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다. 핀란드의 사례를 살펴보면 지역 단위 학생회가 공동의 관심사나 건의사항을 교육위원회에 제안하면, 교육위원회는 간담회 등을 통해 이를 수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사례는 우리나라에도 많은 시사점을 준다.

여섯째, 학교별로 학생이 스스로 참여하여 운영하는 ‘학교 자치법정’ 운영을 활성화하여 자신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가는 과정을 통해 자율적 문제해결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생 자치법정은 학생들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해 나간다는 점에서 중요한 학습의 과정이 될 수 있고, 우리나라의 사법절차에 대해 학습할 수 있다는 부가적인 효과도 있다. 많은 학교가 시행하고 있는 상벌점 제도와 연계하여 학생의 자율적 문제인식 능력을 높이고, 문제해결 역량도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를 갖고 있다.

일곱째, 학생들이 학교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민주 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학생 스스로 참여하여 학급규칙을 만들고, 학교공동체의 학생생활협약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학급수준에서는 학생들이 스스로 지켜야 할 핵심적인 약속을 만들고, 이를 학교수준으로 확대하여 만들어 가는 것이 학교규칙이라고 할

수 있다. 스스로 만든 약속을 스스로 지키도록 하는 것이 준법정신과 민주시민 의식의 기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VI. 나가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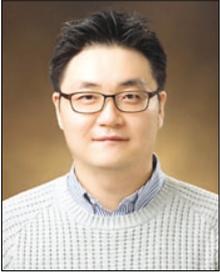
지금까지 지방교육자치제도나 학교자율화 정책 등에 의해 교육자치와 학교자치의 외연은 많이 발전되었지만 학생자치는 많이 진전되지 못했다. 이제는 학생자치활동을 활성화하는 것으로부터 학교문화를 바꾸려는 노력을 시작해야 할 때이다.

교과성적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입시문화의 기존 인식을 전환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서 최근 고등학교 진학에서는 ‘자기주도 학습전형’, 대학 진학에서는 ‘입학사정관제’ 등이 도입되었고, 입학전형에서 학생들의 자율적 비교과 활동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다. 이러한 전형제도의 변화는 학생들의 자치활동을 활성화하는 요인이 될 수 있지만 그동안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어온 학생자치활동을 일시에 변화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학생자치활동의 구체적인 실행과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유사사례 확산이 필요하다.

학교 문화의 선진화를 위한 핵심 가치는 안전과 평화, 참여와 배려, 신뢰와 존중, 선의의 경쟁, 개방과 소통, 자율과 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학교문화의 선진화는 한국 사회의 시민의식 수준의 향상을 그대로 반영하기 때문에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노력을 필요로 한다. 학교 조직의 구성원이 바로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며, 학생들은 미래 한국의 주인공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교육과학기술부(2011). 인성 및 공공의식 함양을 위한 학교문화 선진화 방안.
- 교육과학기술부(2012). 학교폭력 근본 대책으로 인성 교육 실천 본격 추진. 보도자료.
- 김성기(2005). 초·중등학교의 법적 지위와 학교자치. 교육법학연구. 17(1). 대한교육법학회.
- 김성기·조석훈(2009). 초등학교 학생행정 가이드. 서울:학지사.
- 박세훈(2012). 학교자치의 실현을 위한 과제. 한국교육행정학회 소식지 제114호 주론.
- 이병환(2012).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방안. 이슈페이퍼, 2012(6). 한국교육개발원.
- 정제영(2004). 초·중등학교의 지식경영 수준과 유형 분석.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한국교육개발원(2011).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포럼 자료집.
- 한유경·정제영·김성기·정성수·윤신덕(2012). 인성교육 강화를 위한 학교문화 선진화 방안 연구. CR 2012-36. 한국교육개발원.
- 한유경·정제영·김성기·정성수(2012). 학교규칙 운영 내실화 정책사례 분석 및 지원방안 연구. 연구보고 12-R37-2. 교육과학기술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논단 II** |

학생수 전망과 교육재정 기획

Pupil Projections and Educational Finance Planning

엄문영 | 한국교육개발원

I. 들어가며: 학생수 감소와 교육재정 규모 축소 논리의 재검토

가장 최근 발표된 2010년 기준 통계치에 따르면, 한국의 출산율은 1.23명으로 OECD 34개 회원국 중 최하위를 기록하였고, 출산율 하락 속도도 멕시코 다음으로 빠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여성 1명이 평생 1.23명의 자녀를 낳는 것은 한 자녀 정책을 쓰는 중국의 출산율인 1.60명보다 낮고, OECD 평균 1.74명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출산율은 낮아지고, 노인 연령층은 점점 많아짐에 따라, 한국의 정치·경제·사회시스템도 이에 따른 변화를 준비하고, 대책을 마련하느라 분주하다.

중년층 및 노년층의 경제활동 인구가 늘어나고 이를 위한 사회적 배려와 복지제도가 신설되는 반면, 이와 동시에 ‘생산가능인구(15-64세)=국가경쟁력’이라는 전제하에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 친화적인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국가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및 교육부의 실천계획에는 3-5세 누리과정 지원 확대, 유치원과 초등학교 돌봄 프로그램 강화,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 신설 등 출산율 저하 → 인구 감소 → 국가경제성장 둔화 → 국가 경쟁력 약화의 고리를 끊기 위한 노력이 강조되고 있다.

한국의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수 감소는 학생수 감소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를 두고 사회 전반에 불고 있는 유행 같은 논리는 ‘학생수가 감소하니 교육재정은 지금보

다 덜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다. 저출산·고령화 추세에 따라 유·초·중등학교 학생수는 줄어드는 반면, 경제 성장에 따른 내국세 증가로 인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의 자연적 증가가 발생하여 결국 교육재정은 남아서 과잉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자연적 증가분의 교육재정 확보 규모는 경제전망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으나, 매년 적게는 2조원에서 많게는 33조원을 예상하고 있다. 이에 경제계 일각에서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법정교부율을 인하해야 한다거나, 순증 규모를 고려해 고등교육재정까지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는 우리나라의 지역별·학교급별 상이한 교육여건을 고려한 학생수 전망 및 교육여건 추정, 변화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교육에 대한 눈높이를 반영하는 교육정책 추진 등을 고려하여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II. 교육기획(Educational Planning)의 기초로서 학생수 전망: 교육수요 접근법

학생수에 대한 전망(projection)이나 이와 관련된 교육재정의 확보(supply) 및 수요(demand) 예측은 모두 교육기획(educational planning)의 영역에 해당된다. 교육기획이란, “미래의 교육활동에 대비하여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과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교육정책 결정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보장해 주는 지적·합리적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윤정일 외, 2007, p. 198). 교육기

획은 사회·경제 발전의 수단으로 기능하고, 당면하는 교육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교육개혁의 추진 수단이 된다(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001).

일반적으로 기획과 계획은 엄밀한 구분 없이 사용되기도 하나, 기획(planning)은 지속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중시하는 개념이고, 계획(plan)은 과정의 결과로 나타나는 최종적인 산물에 초점을 둔 개념으로 소개된다(윤정일 외, 2007). 따라서 기획은 계획을 포함하는 그 이상의 것으로서, 인력수요(manpower demand) 추정, 수익률(rate of return) 측정, 발전단계(development level) 비교 등의 경제적 관점에 의한 접근법들이 있고, 인구수 및 학생수에 측, 미래의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 수요에 측에 중점을 둔 사회수요(social demand 접근법으로 나뉘질 수 있다. 최근 들어, 논의되고 있는 학생수 감소에 따른 교육재정 규모 축소 주장은 교육기획의 여러 접근법 중 사회수요에 의한 접근법(social demand approach)에 기반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수요 접근법은 교육에 대한 개인적·사회적 수요를 기초로 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교육수요 접근법’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인구의 증감이나 진학 추세 등과 같은 교육의 사회적 수요 증감 추세(trend)를 반영하여 교원 양성과 학교 설립 등의 교육적 투입요소를 계획해 나가는 방법이다(윤정일 외, 2007;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001). 쉽게 표현하면 교육수요 접근법은 학생수 전망과 이에 기반을 둔 교사수, 학급수, 학교수 등의 교육여건을 예측하고, 사회수요로서 개개인의 교육여건에 대한 높이를 교육정책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교육수요 접근법에서는 합리적인 근거에 기반을 둔 학교급별·설립별 학생수 추정이 기초가 된다.

우리나라의 교육기획은 국가적 차원의 교육계획이 주를 이루어 왔다. 의무교육완성 6개년 계획(1954-1959), 1970년의 장기종합교육계획(1972-1986, 1978년의 교육

발전의 전망과 과제 계획안(1978-1991),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의 교육부문 계획 등 범국가 차원에서 교육기획과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대통령 지문 교육개혁기구들이 존재했었다. 그러나 개발경제에 따른 정부주도 교육기획의 문제점이 노출되면서 주기적으로 학생수를 전망하고, 이에 근거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교육기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대한 강조가 오늘날에는 약해지게 되었다.

III. 학생수 전망 방법론

합리적인 학생수 전망은 교육기획의 기초가 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차원의 교육기획에 대한 노력이 자의반타의반으로 주춤함에 따라 교육계에서 학생수 추정은 자체적·주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통계청의 5년 단위 시·도별 인구수 추계나 경제계의 장기 재정전망과정에서 비롯된 학생수 전망치가 조정과정 없이 활용되고 있다. 통계청과 경제계의 학생수 전망치는 (1) 조사시점 차이에 따른 학령인구(4월 1일 기준)와 연령별 인구(7월 1일)의 불일치 문제, (2) 유·초·중등학교진학 과정에서 발생하는 학생의 지역간 이동 문제, (3) 주민등록상 실적치 대비 통계청의 시·도별 인구수 과소 예측의 문제 등이 조정되지 못한 채 교육재정 소요 예측의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이영 외, 2010).

실제로, 이영 외(2010)에 의하면, 2010년 통계청 0-5세 아동수는 실제치보다 약 32% 과소 추정되었고, 이는 출생신고를 늦게 하거나 외국에서 출생하여 귀국한 국제적 사회이동을 반영하지 못한 것에서 기인한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과소 추정의 문제는 추정의 기간이 길어지면 교육통계상의 학생수 실적치와 더 큰 간격을 발생시킬 수 있다. 또한, 통계청의 5년 단위 16개 시·도별 인구추계치(세종시는 2012년 추계 자료에서 제외됨)는 230개 시·군·구별로 교육여건의 큰 편차를 보이는 우리나라

의 실정에서 교육기획의 정확성을 기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진다. 예를 들어, 전국적으로 학생수가 줄어든다고 해도, 서울의 강남구, 서초구의 학생수는 늘어날 수 있고, 도서벽지 지역의 학생수가 급감하지만, 도서벽지를 포함한 시·도 단위의 학생수는 변동이 없을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학생수 전망은 기본적으로 시·군·구 단위 별로 세분화하여 예측하되, 교육통계에서 보고되는 학생수 실적치를 근거로 유량(flow) 개념을 적용하여 이루어져야 바람직하다.

뿐만 아니라, 경제계에서 추정되는 학생수 예측 기간은 10년 이상의 장기 전망이 많은바, 학생수 전망의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추정의 정확성도 떨어지므로, 10년, 20년 등의 장기 전망을 유지하되, 주기적으로 교육통계 실적치를 활용하여 조정 작업을 최소 5년마다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생수 전망을 위한 기초데이터는 230개 시·군·구별 3개 조사시점(2009-2010, 2010-2011, 2011-2012)의 초등학교 1학년 취학률, 상급학교로의 진학률, 상급학년으로의 진급률의 추세(trend)를 반영하기 위해 (1) 최근 4년간 교육통계 데이터, (2) 통계청 시·도별 인구추계 데이터, (3) 주민등록인구 데이터를 활용한다. 통계청 데이터와 주민등록인구 데이터는 230개 시·군·구별 인구추계치를 시·도 대비 시·군·구의 인구구성비율 증감률 추세를 전망 기간까지 반영하여 추출하기 위해 활용된다. 추정된 학교급별 학생수는 교육재정 기획에 활용하기 위해 최근 4년간 교육통계 데이터를 통해 설립유형별 학생수 구성비율 증감률 추세를 반영하여 설립별로 나누어 전망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학교급별 학생수 전망에서 특수학생과 유치원 학생들은 유량(flow)의 개념을 적용하기에 부적절하므로, 저량(stock)의 개념을 적용하여 연령대별 해당 학교급별 학생수 비율의 3개년 평균값으로 유치원 학생수와 특수학교 학생수를 추정하도록 한다. 또한, 특수학교는 모든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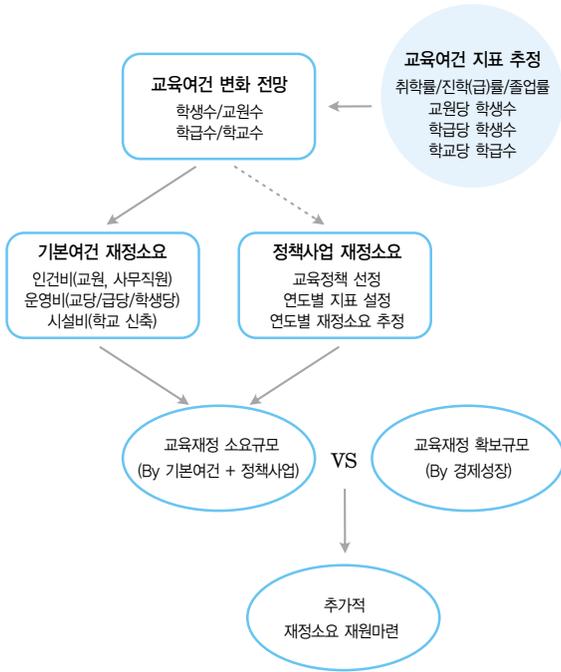
군·구별로 존재하지 않으므로 추정의 기본단위를 시·도 단위로 설정하도록 한다. 이상과 같은 학생수 전망 방법론의 개요를 표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NEAT 2·3급 시험의 주요내용

학교급 (설립별)	지역 단위	적용 원리	적용 지표	기초 데이터	기간
유치원	230개 시·군·구	저량 (stock)	연령별 원아수비율	교육통계 데이터 (최근 4년간) 통계청 인구추계데이터 (시·도별 자료) 주민등록인구 데이터 (230개 지역별)	최소 5년 주기 실적치와 조정 필요
초등학교		유량 (stock)	취학률, 진급률		
중학교			진학률, 진급률		
고등학교			진학률, 진급률		
특수학교	17개 시·도	저량 (stock)	연령별 학생수비율		

IV. 학생수 전망에 기초한 교육재정 기획 모형

교육재정 (educational finance)이 국가·사회의 공익사업인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나 공공단체가 필요한 재원을 확보·배분·지출·평가하는 일련의 경제활동(윤정일, 2004)이라면, 교육재정 기획 (educational finance planning)은 국가나 공공단체의 교육에 관한 살림살이 또는 경제활동에 대한 합리적 계획 과정 또는 그 결과를 의미한다. 교육재정 기획은 교육기획이 성공되기 위한 일차적 요건이 되며, 합리적 학생수 전망이 비롯되어야 가능하다(공은배 외, 1987). 구체적으로 교육재정 기획은 향후 교육재정 소요규모와 확보규모의 예측, 추가적 재정소요에 대한재원 마련 등으로 구성될 수 있고, 교육재정 소요규모는 학생수 전망에 기초한 교육여건 변화 전망과 교육당사자의 눈높이 변화를 수용하는 정책사업 추진 전망에 의해 추정될 수 있다. 다음의 <그림>은 교육재정 기획 모형의 개요를 도식화하고 있다.



〈그림〉 교육재정 기획 모형의 개요

교육여건 변화 전망은 학생수를 추정한 바탕위에 교원당 학생수, 학급당 학생수, 학교당 학급수 등의 교육여건 지표 추세를 반영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교육여건 지표들은 과거의 교육통계 데이터의 실적치로부터 시·군·구별 추세를 반영하는 동시에 교육정책 목표 설정(targeting)을 통해 조정(adjustment)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추정된 학생수, 교원수, 학급수, 학교수는 우리나라 학교급별 교육여건지표를 OECD 회원국의 상위권 수준으로 개선시키는 경우 증원 또는 증설될 수 있는 것이다. 최근 발표된 교육부의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위한 학교별 실태조사 계획(2013. 4. 22~5. 15)은 교육정책 목표 설정에 의한 교육여건 변화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다음 단계로, 변화된 기본여건을 운영하고,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추가적 교육정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교육재정 소요규모와 경제성장예에 의한 교육재정 확보규모를

모를 예측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교육재정 기획에는 산출된 추가적 재정소요 규모만큼의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V. 나오며: 학생수 감소와 교육재정 규모 축소의 단선적 논리 지양

학생수 감소가 교육재정 규모의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단선적 논리는 현 우리나라 교육여건 지표들이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존재하고, 학생과 학부모들의 교육에 대한 기대치가 과거에 비해 절대적으로 높아진 점을 감안하면 위험한 발상이 될 수 있다. 또한, 경제계의 장기 재정전망이나 통계청의 시·도별 인구수 추계에 근거하여 산출된 학생수는 우리나라 지역별 교육여건의 격차들을 반영하지 못하므로 교육통계 데이터의 학생수 실적치에 근거하여 재조정될 필요가 있다. 시·도별 상위 수준에서는 학생수가 점차 감소할 수 있어도, 이것이 반드시 하위 수준의 시·군·구 모든 지역에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학생수는 자연발생적 인구 추계에 많이 의존하는 수치라기보다는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권에 기반을 둔 학교 선택의 결과로서 사회적 이동 요인이 많은 변인이기 때문이다.

만약, 학생수가 전국의 모든 시·군·구에서 감소할 것이라는 강한 가정을 유지한다고 해도 학생수의 감소가 반드시 교원수, 학급수, 학교수로의 즉각적인 변화를 유발하지 못한다. 인적 교육여건으로서 교원수는 그나마 인사발령에 의해 부족한 시·군·구로의 이동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물적 교육여건으로서 학급이나 학교는 학급당 학생수가 감소했다고 당장 없어지거나 폐쇄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최소한의 학생수가 유지되고 있는 학교는 원활한 교육활동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 최소한의 학급과 제반 시설들이 필요한 것이다. 교원수에 있어서

도 교육공무원법상 이미 채용된 교사들을 학생수 급감을 이유로 강제 퇴직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물론, 장기적인 교육재정 기획에서 교육여건의 변화들을 반영하는 것은 옳으나 학생수의 감소와 그 속도는 교원수, 학급수, 학교수 등의 여타 교육여건 변화 및 속도와는 다르게 고려되어야 한다.

향후 학생수의 감소는 우리나라 교육여건의 자연적 개선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자연적 개선의 효과도 학생과 학부모들의 교육여건에 대한 현재 기대치가 미래에도 그대로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교육기획과 교육재정 기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교육여건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점점 높아지는 기대치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선풍기만으로도 족했던 여건이 이제는 에어컨을 당연한 학교시설로 받아들이는 시대가 오고, 보다 쾌적한 화장실 시설, 안락한 책·결상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목소리가 학교 현장에서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다. 경제계 일각에서는 교육재정 증가요구를 단순한 다다익선식의 주장으로만 받아들이기 보다는 그동안 해결되지 못했지만 꼭 반영해야 하는 교육여건 개선의 기회가 왔다는 생각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여건에 대한 개선 수요를 꼼꼼히 재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교육재정은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도 가장 먼저 확보해 놓아야 하는 필수적 영역이지 가장 쉽게 감축할 수 있는 부차적 항목이 아니기 때문이다.

참고 문헌

- 공은배 · 천세영 · 한유경 (1987). 교육재정 소요판단.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교육부 (2013. “행복교육, 창의인재 양성” 교육부 2013년 국정과제 실천계획. 2013. 3. 28.
- 교육부 보도자료(2013.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위한 학교별 실태조사 실시. 2013. 4. 22.
- 윤정일 (2004). 교육재정학원론. 서울: 세영사.
- 윤정일 · 송기창 · 조동섭 · 김병주 (2007). 교육행정학원론. 서울: 학지사.
- 이영 · 한유경 · 김이경 · 김광호 · 정미경 · 이기준 (2010). 2011-2020중장기 교원수급계획 수립 및 교원양성기관 규모 적정화 · 내실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001). 교육재정경제학 백과사전. 서울: 하우동설.

· 학회 활동 안내 ·

학회 회의 개최

☞ 제1차 학술위원회 회의

- 일시 : 2013년 2월 1일(금) 10:30
- 장소 : 중앙대학교 R&D센터
- 안건 : 2013년도 학술대회 초안 기획 및
 춘계학술대회 주제 설정

☞ 제2차 사무국 운영회의

- 일시 : 2013년 4월 8일(월) 18:00
- 장소 : 가나안덕
- 안건 : 춘계학술대회 준비 및 학회요람 건 협의

☞ 제1차 정기 이사회

- 일시 : 2013년 2월 20일(수) 11:00
- 장소 : 진진바라 서울점
- 안건 : 2013년도 사업계획 및 학회 운영 보고

☞ 제3차 사무국 운영회의

- 일시 : 2013년 4월 23일(화) 18:00
- 장소 : 경인교육대학교
- 안건 : 40대에서 추진하던 회원주소록 건 및
 춘계학술대회 진행사항 점검

☞ 제1차 사무국 운영회의

- 일시 : 2013년 1월 8일(화) 18:00
- 장소 : 락앤웍 송도점
- 안건 : 2013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및
 회원관리 방안 협의

학술지 논문게재 안내

☞ 원고접수 : 수시 접수체제로 운영(홈페이지 접수)

권·호	심사접수 마감일	발간예정일	
제31권 (2013년)	1호	2월 28일	4월 30일
	2호	5월 31일	7월 31일
	3호	8월 31일	10월 31일
	4호	10월 30일	12월 31일

☞ 논문 심사 적부 판정

논문 본심사에 앞서 ‘교육행정학’ 논문에 대한 적부심사를 편집위원회에서 거칠 예정(‘적’으로 판정되면 논문 심사 진행, ‘부’로 판정되면 심사비 환불 및 심사 진행 불가)

☒ 원고분량

- ① A4용지 20페이지(참고문헌, 영문초록 포함)
- ② 이를 기준으로 10페이지를 초과할 수 없으며, 20페이지에서 1페이지 초과시마다 3만원을 추가
- ③ 규정개정으로 인하여 최대 30페이지를 초과하는 논문은 접수하지 않음

☒ 심사료

100,000원(외국어 논문심사료 150,000원)

☒ 게재료

- ① 입금시기: 심사결과 '게재가'로 결정된 후에 입금
- ② 게재료: - 연구비 수혜를 받아서 게재된 논문은 400,000원 이상
- 연구비 수혜 없이 작성된 논문은 100,000원 이상
- ③ 입금계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카드 결제 가능(문의: 편집간사 010-7160-5107)

☒ 기타

접수마감 당일 자정까지 접수하며 기한을 넘긴 논문은 다음 호심사로 이관됨

회원가입 및 회비납부 현황

☒ 신규회원 (2013년 1월 1일~4월 30일)

• 개인회원

강민정, 강진옥, 강호수, 권새봄, 권혁미, 김근진, 김대영, 김덕희, 김동현, 김선영, 김인숙, 류근하, 문보은, 민경태, 민병철, 박상훈, 박신영, 박주미, 박 찬, 송주현, 이길재, 이미혜, 이선옥, 이영철, 이현철, 이형빈, 이혜경, 정지원, 정홍인, 조대연, 조정대, 차정주, 홍은광

• 기관회원

영남대학교 도서관, 가톨릭대학교 도서관, 경인교육대학교 도서관, 전남교육과학연구원, 한국교원대학교 도서관

※ 연회비를 납부하시고도 위 명단에 기재가 되지 않은 경우, 학회 사무국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연회비 납입 시 반드시 '성명'과 '연회비'로 기재하여 이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41대 한국교육행정학회 임원

☐ 회장단

- 회 장: 이윤식(인천대학교)
- 부회장: 박세훈(전북대학교)
- 감 사: 남수경(강원대) 염민호(전남대)

☐ 이사회

- 당연직 위원 32명

김영식 신극범 김윤태 김재범 신철순 정태범 김명한 남정걸 이형행 강영삼 윤정일 신중식 곽영우
최희선 한경수 김신복 주삼환 이종재 서정화 노종희 강무섭 강인수 정진환 박종렬 정영수 김명수
신재철 송광용 임연기 허병기 이윤식 박세훈

- 선임직 위원 46명

강경석(인하대)	고광혁(인하대)	고 전(제주대)	공은배(KEDI)	김갑성(KEDI)
김경희(성신여대)	김남순(조선대)	김민희(대구대)	김병주(영남대)	김병찬(경희대)
김성열(경남대)	김영철(한국교육정책연구원)		김이경(중앙대)	김인희(교원대)
김재웅(서강대)	김태완(KEDI)	김혜숙(연세대)	김흥주(KEDI)	나민주(충북대)
노희정(인천교육청)	박남기(광주교대)	박선형(동국대)	박영숙(KEDI)	반상진(전북대)
송경오(조선대)	송기창(숙명여대)	신상명(경북대)	신재흠(한성대)	신정철(서울대)
신현석(고려대)	엄상현(단국대)	우명숙(교원대)	유현숙(KEDI)	이일용(중앙대)
임천순(세종대)	전제상(공주교대)	정기오(교원대)	정성수(대구교대)	정수현(서울교대)
정일환(대구가톨릭대)		조동섭(경인교대)	주철안(부산대)	진동섭(서울대)
천세영(충남대)	최준렬(공주대)	한유경(이화여대)	(가나다 순)	

☐ 분과위원회 구성

- 기획·홍보위원회

– 위원장: 김재웅(서강대) – 부위원장: 김민희(대구대)
– 위 원: 김갑성(KEDI), 김정현(한국방송통신대), 박상완(부산교대), 박진형(영산대), 이석열(남서울대),
장수명(교원대)

- 학술위원회

– 위원장: 김이경(중앙대) – 부위원장: 박선형(동국대)
– 위 원: 김갑성(KEDI), 김병찬(경희대), 박소영(숙명여대), 백정하(대교협), 이덕난(국회입법조사처),
이정열(중부대), 이태상(상지대), 주현준(대구교대), 황영남(영훈고)

- 편집위원회

– 위원장: 김병주(영남대) – 부위원장: 나민주(충북대)

- 위 원: 남수경(강원대), 박수정(충남대), 반상진(전북대), 염민호(전남대), 오세희(인제대), 이수정(단국대), 이인회(제주대), 이정미(KEDI), 정제영(이화여대), 조석훈(가천대)
- 국제 학술위원회
 - 위원장: 신정철(서울대) - 부위원장: 송경오(조선대)
 - 위 원: 고장완(성균관대), 고전(제주대), 박애리(숭실대), 박주호(한양대), 양성관(전국대), 엄문영(KEDI), 오범호(경남대), 이길재(미네소타대), 장덕호(상명대), 정제영(이화여대), 주현준(대구교대)
- 학회 발전위원회
 - 위원장: 신현석(고려대) - 부위원장: 고 전(제주대)
 - 위 원: 김병찬(경희대), 김용련(외국어대), 박선형(동국대), 박소영(숙명여대), 정수현(서울교대)
- 규정위원회
 - 위원장: 전제상(공주교대) - 부위원장: 정성수(대구교대)
 - 위 원: 김수영(강릉영동대), 김숙이(충북대 지방교육연구센터), 김현진(국민대), 안병천(검단초), 이명주(공주교대), 황준성(KEDI)
- 재정·기금위원회
 - 위원장: 강경석(인하대) - 부위원장: 고광혁(인하대)
 - 위 원: 김성기(협성대), 김철구(인천교육청), 박인심(서울여대), 박정원(경기교육청), 백정하(대교협), 우인상(인천교육청)
- 학술편찬위원회
 - 위원장: 정일환(대구가톨릭대) - 부위원장: 이일용(중앙대)
 - 위 원: 노종희(전 한양대), 서정화(전 흥익대), 임천순(세종대), 김명수(교원대), 김영철(한국교육정책연구원), 박재윤(KEDI), 박종렬(경북대), 정영수(전 충북대)
- 윤리위원회
 - 위원장: 신재흡(한성대) - 부위원장: 노희정(인천교육청)
 - 위 원: 고학재(구산중), 김희규(신라대), 이상미(영흥초), 이석열(남서울대), 조흥순(광주여대)
- 정책연구위원회
 - 위원장: 유현숙(KEDI) - 부위원장: 반상진(전북대)
 - 위 원: 박인심(서울여대), 변기용(고려대), 송선영(대학교육협의회), 장덕호(상명대), 채재은(가천대), 최정윤(KEDI)
- 부회장선출위원회
 - 위원장: 김인희(교원대) - 부위원장: 우명숙(교원대)
 - 위 원: 권동택(교원대), 박철희(경인교대), 배상훈(성균관대), 이인회(제주대), 장환영(동국대)
- 소석논문상위원회
 - 위원장: 정태범(전 교원대) - 부위원장: 강영삼(전 국민대)
 - 위 원: 강무섭(강남대), 노종희(전 한양대), 강인수(수원대), 신종식(전 국민대), 이종재(전 서울대), 주삼환(전 충남대), 송기창(숙명여대)



한국교육행정학회 윤리 헌장

한국교육행정학회 윤리헌장은 회원이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윤리적 원칙과 기준을 정하여 본 학회는 물론 회원 개인의 윤리성을 고양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다음의 대용을 준수해야 한다.

- ① 회원은 학회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성실하게 의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② 회원은 학회 활동을 통하여 교육행정학과 한국교육행정의 발전에 기여하고 공익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 ③ 회원은 학술활동 관련 법률 및 학회 윤리규정, 학계에서 권장하는 기본적인 연구 학술 윤리를 준수하여야 한다.
- ④ 회원은 타인의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지 아니하며, 타인의 저작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 ⑤ 연구관련 심사 및 자문을 하는 회원은 학문적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제출자와 제출내용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⑥ 회원은 연구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이득을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⑦ 회원은 연구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 ⑧ 회원은 학술활동 관련 연구대상자 및 연구보조자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2007. 4. 27



한국교육행정학회